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두고 ‘시끌’…野, 필리버스터 예고

輿,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의지 법조계 “중립성·사법부 신뢰 훼손” 범여권 “輿 추진 방식, 위험성 있어” 野, ‘필리버스터 제한법’ 저지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기습자의 처벌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법조계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면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올해 안에 처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전국 각급 법원장이 한 자리에 모인 법원장 회의에선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천대업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지난 5일 전국법원장 정례회의의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

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염중히 인식한다”면서도 “이 법안들에 대한 위헌 소지와 그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거나 무위가 될 큰 염려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외

부 기관이 참여해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특정 재판 담당 법관을 개별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검사 등 사법 담당 공무원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적용할 경우 적용하는 법 왜곡죄도 내용이 주상적이고 처벌 범위가 오히려 넓어진다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자체엔 이미 찬성을 밝혔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빙점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별법의 재판정치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 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

려 한다”며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원내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를 법안과 함께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까지 추진하려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며 연말 정국은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들어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이달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사무총장은 위헌성 여부와 관련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들 내에서도 위헌성 시비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輿野, 본회의·임시회 앞둬… 연내 ‘반도체특별법’ 처리 기대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는 반영 안 돼
재정 지원 의무화 조항 등 추가 논의
野 필리버스터 예고에 신속처리 미지수

여야가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와 곧바로 임시회까지 앞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합의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연내 처리될지 관심을 모은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여곡절 끝에 산자위는 지난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각국의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발의됐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설치비용 지원,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중소·중견 기업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이 핵심 골자다.

국민의힘이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반도체 기업 고소득 연구·개발 종사자의 주52시간 제도 면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담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해당 조항이 담기지 않은

특별법에 결사반대했지만, 의석수 과반 이상을 점한 민주당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후 상임위 심사 기간이 지나며 법사위에자동부의 돼, 더 이상 다뤄봤자 실의이 없다는 판단에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근로시간을 제한받는다는 것이 산업의 미래에 굉장히 큰 영향일 끼칠 수 있는 만큼 주 52시간 예외를 주장해왔는데 넓지 못해 아쉽다”며 “따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반 빌자국 정도 나아갔다고 본다”고 했다.

김원이 산자위 여당 간사 김원이 의원은 “주 52시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암해와 이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중국 추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규 산업위원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우리 위원회의 이번 제정법률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더 이상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주 52시간제 면제에 대한 논의를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에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항 삽입 여부는 논의를 더 거칠 전망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별의안에는 보조금 등 산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었지만, 다른 의원들이 별의한 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다만, 특별법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남기고 있고 국민의힘이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과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서 반도체특별법이 9일 본회의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태홍 기자

李 대통령, 전 국민에 ‘228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생중계

내년 국정운영 기조 미리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부터 19부 187개 7위원회 포함 2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는 사상 최초로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내년 국정운영 기조를 ‘미리’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 기획재정부 등을 시작으로 전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후 6개월 간의 주요 성과와 보완점, 향후 업무 추진 방향과 부처별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자유 토의도 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이재명 정부 이후 생중계 체제로 전환한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KTV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모두 공개된다. 단 외교나 안보 등 보안이 필요한 부처 보고의 경우 비공개로 이뤄진다. 업무보고는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직접 순회하며 이뤄진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취임 이후 사안별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정 현황을 파악해 왔다. 부처별 집중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후 처음 있는 일로, 2026년 국정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업무보고에서는 부처별 국정현황만 보고되지는 않는다. 2026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이를 토대로 한 민생 경제 회복, 6대 핵심분야 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정 구상을 구체적으로 ‘미리보기’하는 자리인 셈이다.

행하는 이유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이 대통령은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는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업무보고에서는 부처별 국정현황만 보고되지는 않는다. 2026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이를 토대로 한 민생 경제 회복, 6대 핵심분야 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정 구상을 구체적으로 ‘미리보기’하는 자리인 셈이다.

/서예진 기자 syj@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李 대통령,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 인선 헌법적 가치 복원할 적임자·전문가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사진)를 지명했다. 이규연 홍보 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울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서울 출신의 김 후보자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경찰국 신설과 군의문사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진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감사원장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국민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라고 기대했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은 지난달 1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감사원장 임기는 4년이다.

/서예진 기자